“지식재산센터 육성, 연구개발 지원 확대해야”

수습 사무관들의 전남 발전 제안

“특허출원·R&D 적극 투자, 관광산업 체계화 필요”

지식재산이나 연구개발 등 미래에 대한 전남의 투자가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7월부터 내년 4월까지 전남도에 각 실·국에 배치돼 수습 과정을 밟고 있는 행시 57회 합격자 10명은 5일 오후 연구과제 발표회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전남도 경제과학국 소속 허성(30) 수습 사무관의 ‘전남지식재산센터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해 전남의 특허, 실용신안 출원은 각각 2026건, 127건에 불과해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15개 광역지자체 가운데 최하위를 기록했다. 디자인(675건), 상표(1746건) 등을 포함한 전체 지식재산권 출원건수도 4574건에 불과했다.

특허 출원 건수 면에서만 살펴보면 경북(7634건)의 1/4 수준이었으며, 상표 출원 건수 면에서는 강원(2348건)의 절반 수준이었다.

같은 국 소속 김태우 수습 사무관도 ‘인재·기술 중심의 지역산업경쟁력 강화 방안’이라는 연구주제 발표에서 지난 2012년 전남의 연구개발비는 5640억원으로 16개 시·도 가운데 14위, 전국 대비 1.0%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해 연구개발 조직은 전국 대비 1.4%로, 오히려 지난 2005년(1.5%)에 비해 하락하고, 연구개발인력은 지난 2009년 5526명에서 2012년에는 3838명으로 줄었다.

허 사무관은 ▲지식재산센터를 전문기관으로 육성할 것 ▲관련 예산 증액 및 본 예산 반영 등을, 김 사무관은 ▲인력수급 정상화 구조 정착 ▲R&D 지원체계 정비 및 지원 확대 등을 각각 대안으로 제시했다.

전남도가 중점 추진한 행복마을사업에 대한 개선 방안도 제시됐다.

건설방재국 박형재(30) 수습 사무관은 현재 행복마을의 문제점을 경관 미흡, 부족한 관광프로그램과 서비스의식이 낮은 주민, 주민 갈등 및 사업 사각지대 존재, 불편한 한옥 등으로 선별한 뒤 선도마을 집중 지원, 공동주거 도입 등의 대안을 내놓기도 했다.

수습사무관 10명 가운데 지역 출신은 4명, 수도권 및 타 지역 출신은 6명으로, 이들은 지난 8월18일부터 매주 한 차례 지역아동센터를 찾아 학습도우미를 하며 재능봉사에도 나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신동헌(33) 수습사무관 대표는 “전남도의 수려한 자연경관과 자원을 바탕으로 관광산업을 좀 더 체계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며 “앞으로 정부부처에서 근무할 때 전남도의 수습 경험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전남도의회 46일간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예산안 심의

전남도의회는 7일부터 12월22일까지 46일간의 일정으로 올해 마지막으로 제291회 정례회를 연다.

7일 오전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이낙연 전남지사와 장만채 전남도교육감으로부터 2015년도 전남도 및 전남도교육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 및 교육시책 연설과 제안 설명을 청취할 예정이다.

이번 정례회에 접수된 의안은 모두 15건으로, ‘전라남도 국내·외 기업 및 자본 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도지사가 발의한 5건, 김성일 의원 등 20명이 발의한 ‘쌀 값 등 기초농산물 가격안정대책 조기 집행 촉구 결의안’ 등 5건, ‘전라남도립학교 이설 동의안’ 등 교육감 발의안 5건 등이다.

오는 10일부터 21일까지 전남도청 및 전남도교육청에서 추진한 각종 시책과 현안사업 및 예산집행 상황 등 주요 업무 전반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이어 상임위원회별로 도청과 도교육청의 내년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하게 된다.

다음달 9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전남도청와 전남도교육청의 201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고, 그동안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친 2015년도 예산안 등 각종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정례회 마지막날인 12월22일에는 그동안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과 도청 및 도교육청 소관 정리 추경 예산안을 의결하고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한 뒤 129일간의 올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게 된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24면 발행·호남최대부수
광주일보 ☎ 062-222-8111

건강친화도시 조성 도심 건강걷기

광주시 동구는 5일 구민 5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운림동 일대 동적골에서 ‘도심 건강길 걷기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걷기대회는 생활 터 주변 걷기운동으로 건강생활을 실천하고 활력 넘치는 건강친화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대망론’ 사실 아니다”… 반기문, 국내 정치와 선긋기

여론조사 등 자제 당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측은 4일(현지시간) 한국 내 정치권에서 확산하는 ‘반기문 대망론’에 대해 “반 총장은 전혀 아는 바도 없고,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반 총장 측은 이날 배포한 ‘언론대응자료’를 통해 “최근 일부 정치권과 언론 등에서 반기문 총장의 향후 국내 정치 관련 관심을 시사하는 듯한 보도를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자료는 반 총장이 직접 작성한 것은 아니나 보좌진이 반 총장의 허가를 받아 정리해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반 총장 측은 테러 위협, 에볼라 사태 등 동시다발적 국제 이슈 해결에 반 총장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출신국 국내 정치 관련 보도가 계속되는 경우, 유엔 회원국들과 사무국 직원들로부터 불필요한 의문이 제기됨으로써 유엔 사무총장으로서의 직무수행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반 총장은 불편부당한 위치에서 국제사회 전체의 이익을 대변해야 할 유엔 사무총장을 자신의 의사와 전혀 무관하게 국내 정치 문제에 연계시키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표명해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여론조사를 포함한 국내 정치 관련 보도를 자제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반 총장 측은 “반 총장은 지난 8년간 한국 정부와 국민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한결같은 성원에 깊이 감사드리고 있다”며 “앞으로도 일신우일신하는 자세로 유엔 사무총장 직무 수행에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6년 말로 임기가 끝나는 반 총장이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 차기 대선주자 지지율 1위에 오르면서 여야 정치권을 중심으로 ‘대망론’이 확산됐다.

/연합뉴스

“김대중·박정희 위대한 지도자”

이낙연 지사, 월례조회서

이낙연 전남지사는 5일 “김대중 전 대통령과 박정희 전 대통령은 위대한 지도자”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날 월례 조회에서 “대한민국 현대사는 김대중 패러다임과 박정희 패러다임 교직(交織)의 역사”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두 분은 산업화와 민주화 성과, 인권 등으로 대칭되는 철학을 상징하는 분”이라며 “이들 중 하나만 있었더라도 우리나라가 이만큼 (성장)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두 분의 철학은 시대에 따라 변형은 있겠지만, 철학 자체는 변하지 않을 것”이라며 “(두 분의 철학이) 때로는 상승효과를 보여 (대한민국이) 이렇게까지 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 지사의 이 같은 발언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산업화와 김대중 전 대통령의 민주화 ‘업적’이 존중받아야 한다는 뜻으로 읽힌다. 특히 박정희 전 대통령을 김대중 전 대통령과 함께 ‘위대한 지도자’라고 지칭해 눈길을 끌었다.

이 지사는 지난 3일 광주시와 공동으로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지역 현안사업을 설명하고 예산확보를 요청한데 이어 4일 오전에도 새정치민주연합과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당 차원의 협조를 요청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전남 기초수급자

10가구당 1명

광주와 전남지역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10가구당 1명꼴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급 가구 비율도 전국 17개 시·도에서 최상위였다.

5일 안전행정부가 ‘내고장 알리미’를 통해 공개한 기초생활수급자 현황에 따르면 광주는 전체 56만3599가구 중 수급자는 5만9962명으로 가구당 0.11명에 달했다. 전남은 81만5769가구 중 8만315명으로 0.10명이었다. ‘열 집에 한 명’꼴로 생활형편이 어려운 이웃이 살고 있는 셈이다.

울산과 경기가 0.04명으로 가장 낮았으며 서울은 0.05명, 인천은 0.06명 등이다. 전북이 0.12명으로 가구 대비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이 가장 높았다.

기초생활수급 가구 중 소년소녀 가장비율도 전남은 1.22%, 광주는 1.06%로 전국 최상위권이었다. 전남은 전체 4만8417가구중 590가구, 광주는 3만1273가구 중 313가구로 조사됐다.

전남은 전국 시·도 중 강원(1.35%) 다음으로 높았으며 광주는 광역시 중 울산(1.13%) 다음이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일반과 시설에 수용중인 경우를 모두 합해 광주가 5만9962명, 전남은 8만315명으로 집계됐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